

투데이 칼럼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냉철하게 지켜보아야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원전부지 내 핵 폐기물 임시전처리장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단위공론화를 위해 사전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준비단이 정책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대처하여야만 한다. 지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준비단은 8월 29일 제13차 회의 시 공론화에 참여할 주민의 의견수렴 범위를 아래의 안건 중에서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제1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20~30km 이내) 내 주민으로 하되 원전 소재지에 거주자를 더 많이 부여한다. 제2안 : 원전반경 5km 이내 원전 소재 관할자치체 위주로 하고 비소재지인 해당자치체 포함여부는 관할자치체에서 결정한다. 제3안 : 정부부처가 결정한다. 제4안 : 주민의 경우, 객관적 피해상황을 파악할 정도의 거주지 부여는 또 다른 피해지역을 안산하므로 그 정



전 민 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고창군의 경우 원전소재지인 영광군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현수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한 객관적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 3안의 경우, 원전소재지와 중앙부처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결정의 설계를 맡기는 것은 준비단 스스로 자기 존재의 부정이며 직무유기다. 또한 그동안 회의진행 과정에서 보여왔던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훼손하는 행위이다. 지역간 갈등을 조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향후 재검토준비단 진행과정을 세 가지 관점에서 냉철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첫째, 준비단의 정책성이 무엇인가를 지켜보아야 한다.

진행되는 형국을 보면 공론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 집단만의 회의를 위한 준비단인지 도무지 그 정책성을 알 수가 없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넓게 할 경우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이 하나의 유력한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 조정은 공론화의 꽃이고 위원회 고유의 영역이다. 준비단은 합리적 기본 틀 작성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면 된다. 둘째, 준비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갈렸다.

5km 이내 원전소재지 지역주민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측(12명)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야 한다는 환경시민단체측(3명)으로 양분되다시피 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또 다시 다수결의 횡포로 귀착될지는 표결결과를 지켜보자. 셋째, 준비단의 자기 치유력이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있어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원전 비소재지역 주민이 준비단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준비단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비정상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비소재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공론화 틀을 마련하여 준비단 자체의 치유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준비단을 보는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날이 높아지고 냉철해지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의 행보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준비단은 세상 이치와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마련함으로써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향후 진행될 공론화에도 좋은 논의 환경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본다.

사설

청년 실업 문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부심하고 있는 요즘이다. 서울의 유명한 언론사들도 그에 대한 기획 기사를 내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전북도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그래도 미취업자들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도내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얼핏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할 이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비경제 활동자는 실업자와 달리 앞으로 계속 무직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래도 전북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약발이 제대로 있을 지가 의문이다. 공무원 채용은 극히 일부만 구제시킬 뿐이니 말이다. 저번에 공무원의 응시율을 보니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그때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많은 응시자 중에 한 명만 뽑는 것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터이다. 전북도는 그러므로 다른 관점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겠다. 도내에 관함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모두들 협조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기업들도 그래야 한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관함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언론 홍보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척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로는 곤란하다. 관함은 일자리 만들기는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거러야만 한다. 도내에는 취업을 절박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관함은 일자리 만들기는 한두 번 시도해 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함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서 실적 운운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경제 활동자로 분류된 이들은 늘고 싶어 놓고 있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것이다. 전북도는 그것을 알아야겠다.

독자재언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협조를 당부하며...

출퇴근길에는 항상 차량이 많다. 특히 주요 교차로는 더욱 그렇다. 교통안전에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교차로에 진출하여 근무를 한다. 호루라기와 경광등을 이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지선을 넘지 않게 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고, 신호가 바뀔 때쯤 교차로 교차로가 심해지면 차량을 먼저 끊어주는 근무를 하고 있다. 아쉬운 건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잘 따라주지 않고 진행을 하려는 차들로 인하여 차량 소통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가끔 운전자들은 교통신호가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때를 경험할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까? 정답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매우 중요하다. 차량의 막힌 구간을 소통시키기 위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신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이 붙는다. 수신호를 하고 있다고 하여 무시하고 통행하는 행동, 창문을 열고 자기 쪽을 빨리 가게끔 신호를 보내라는 행동 등은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 교통경찰관의 잠깐 긴 하얀 손과 호각 소리에 차량을 움직인다면 안전한 교통흐름이 될 것이다. 이진제전주원안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교황, 가톨릭 성직자 성폭력 언급 "신께 용서 구한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8일(현지시간) 성직자들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신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아일랜드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전 녹 성지(Knock Shrine)에서 행한 삼종기도 강론에서 "성모님께서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드린다. 나는 특히 성모상 앞에서 아일랜드 교회 성직자들이 행한 모든 학대의 생존자 및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다.

전주 구도심 활성화 진척이 궁금하다

전주시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구도심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구도심사 공터에 전라 광역 건물을 짓는 등 애를 쓰고 있지만 그밖의 구역들은 변화가 없으니 하는 말이다. 구도심 활성화 플랜을 보고서 주거 환경 개선 등 인구 유입 효과가 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심겁다. 전라 광역 말고는 하나도 진척이 없는 까닭이다. 그동안 청사신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다른 쪽들은 잠잠하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전주시가 애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전주시가 지난날 천명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약속 하던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구도심을 문화와 인문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말 잔치에 그치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시일이 어느만큼 지났으면 결과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적거리라는 게 역력하다. 전주시는 이제 속도감 있게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광범을 힘차게 펼쳤으면 일의 추진도 그래야 한다. 뜬 뜬이는 식으로 건네 가지 마라는 당부이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HC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HCG를 위해서 힘찬 추진을 보였으면 한다. 앞으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만의 신한 반복에선 안 되겠기에 하는 당부이다. 전주시는 '도시공간 재창조'도 천명했으므로 실현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의 환경이 이렇지 않게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도심지 중 일부인 서도송동 지역은 사람이 안 사는 게기가 많다. 도로에서는 폐가들이 안보여도 높은 빌딩에서는 풍물스런 모습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제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